

## ‘통합특별시’에 20조 지원…‘서울시급’ 지위 부여

김민석 총리, 행정통합 4대 분야 인센티브 발표

2차 공공기관 이전 우대…교부세·지원금 등 신설  
투자유치 지원 기업하기 좋은 ‘창업중심 도시’ 육성  
광주·전남 통합편 예산 25조 규모 ‘빅3’ 광역단체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과 서울특별시와 준하는 위상 강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8·10·19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현실화되면, 광주·전남은 광주 7조7000억원, 전남 11조7000억원을 더해 연간 예산 25조원 규모의 재정력을 갖춘 국내 빅3 광역단체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이라며 “통합이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마련한 4대 분야는

△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이전 △산업활성화 등이다.

통합특별시에는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한다. 세부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통합지방정부 재정지원 특별팀(TF)에서 확정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높이기도 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 가능성도 있고, 소속 공무원 선발, 임용, 승진 등 인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도 강화된다.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서도 통합 특별시를 우대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민 협의회 발대식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및 주요 내빈들이 토크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 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특별시로 이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 보조금과 교육 훈련 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 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

을 추진하고, 통합 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 발전 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 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이같은 인센티브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면서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정부 “재정분권 확대 위해 국세·지방세 7대 3 상향”

12명 위원 범정부TF 출범…상반기 세무안 도출  
‘지방주도 성장’ 재정여건 개선 방안도 논의키로

정부가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재정분권 TF(테스크포스) 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발족하고, TF 첫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적인 재정분권 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윤창렬 실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1, 2 단계로 지방재정분권 문제를 논의해 온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난 2018년 ‘78대 22’에서 지난 2023년 ‘75대 25’ 수

준으로 변화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좀 높여서 7대 3 수준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TF에 참여하는 정부위원은 심종섭 국조실 국경운영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장흥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등 5명이다.

이밖에도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인 민간위원 6명(김정훈 재정정책연구위원, 장,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원 부경대 행정복지학과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이 함께 참여해 TF는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윤 실장은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금년 상반기 내에 안을 만들어 보여주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2단계 재정분권 등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여건 개선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월 1회 이상 TF 회의를 열어 세부적인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도민 숙원’ 전남 국립의대 신설 탄력 받는다

순천대 학생들, 목포대와 대학통합 ‘찬성’  
대학측, 통합·의대 정원 배정 절차 밟을 듯

전남 순천대가 우여곡절 끝에 국립목포대와의 통합에 대한 구성원 동의를 확보하면서, 통합을 전제로 추진돼 온 국립 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전남도와 순천대학교 등에 따르면 순천대는 지난 16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통합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50.34%를 기록해 가결 요건인 과반을 충족했다. 전체 학생 6328명 가운데 3127명(49.4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은 1574명(50.34%), 반대는 1553명(49.66%)으로 나타났다.

순천대는 목포대와 함께 통합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 교육부의 통합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대학 측은 “대학 내부 논의와 목포대와의 협의를 거쳐 향후 일정과 절차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여곡절 속에 대학 통합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전남도와 목포대, 순천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국립

의과대학 설립 역시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순천대의 통합 찬성 결정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대학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선택 앞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양 대학 구성원께 감사드린다”며 “성찰과 숙의를 거듭해 이뤄진 이번 결정은 집단지성의 힘이 응축된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